

국정원장·국방장관 “김정일 사망 北 발표 후 알았다”

정보력·외교력 부재 ‘한심한 정부’

국회 “한반도 평화 국제적 공조 역부족” 질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빈약한 외교력과 정보력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의 남북관계 안정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이끌기에는 역부족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0일 열린 국회 정보위와 국방위에서는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북한 측의 공식 발표 이후에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파악한 것이 확인됐다.

국정원 측은 이날 오전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된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소집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 측의 공식 발표 이후에야 김 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파악했다”고 보고했다고 권영세 정보위원장이 전했다.

권 위원장은 “중국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북한 측 발표 이전에 (김 위원장 사망을) 알았다고 할 만한 징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남북 간의 대결 국면으로 갔기 때문에 북한 측 사정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 원장은 “아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이날 열린

국방위에서 김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 “저도 뉴스를 보고 (사망 소식을) 알았다”며 “현재의 국방 체제를 가지고서는 김 위원장의 사망을 알기는 다소 제한된 면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는 정부의 정보수집 능력뿐 아니라 정보 해석능력도 ‘한심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구상환 의원은 이날 “이번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반드시 정보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으며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당국의 정보수집 능력이 인터넷 검색 수준”이라고 혀를 찼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정보수집 능력은 고사하고 위기관리 능력에서도 심각한 부족함이 드러났다”며 “삼성의 정보력만도 못하다는 게 국민의 시각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는 삼성의 고위 임원이 북한의 공식 발표 전에 한 언론사에 김 위원장 사망을 확인한 사실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구상환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의 중대발표 이후 50시간 동안이나 북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중국 정상과 통화를 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중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전화통화는



20일 오전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 참석한 유세훈 국정원장(왼쪽)과 국방위원회에 참석한 김관진 국방장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렇게 익숙지 않아서~”라고 말을 흐렸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북한의 핵 실험시에도 한 시간 전에 중국이 통보를 해줬었는데 이제는 사후 통화도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하냐”고 따졌다.

정부와 달리, 북한이 특별방송을 예고한 점에 착안해 일부 대북매체에서 ‘김 위원장 사망’을 예상한 것을 놓



고도 질책이 계속됐다.

민주당 신낙균 의원 등은 “데일리 NK가 북한의 발표 20여분 전에 김 위원장 사망 가능성에 대한 기사를 올렸지만 정부는 그런 해석도 못했다”며 “우리 정보기관이 김 위원장 중병설이 나올 때 ‘양지질까지 파악하고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허구였지는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무상급식 주민투표 강행에 정치권 격변 불러 복지논쟁 국가적 화두로 부상

회고 2011

- 1 안철수 현상
- 2 '도가니' 충격
- 3 기아차 질주
- 4 영육의 5·18
- 5 야권통합
- 6 부실대학 퇴출
- 7 조선대 총장 선거 파문
- 8 무상급식과 복지 재정난
- 9 풍성한 국제행사
- 10 가거도 방파제 붕괴

2011년 정치권에서는 복지 논쟁이 최대 화두였다. ‘무상 급식’ 문제를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패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촉발된 무상복지 논란은 국가적 화두로 부상했다.

야권에서는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무상복지, 여권에서는 필요한 사람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선별적 복지정책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무상급식 등 복지 논쟁은 내년 총선과 대선 등 양대 선거를 앞두고 ‘2라운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복지 논쟁 속에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 교육청, 각 자치단체 등은 올해 말 빠르게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나섰다. 예산 확보가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유치원, 초·중·고 등 모두 1164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광주의 경우 전국 최초로 147개 초등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했고, 이에 따라 전체 초등학교 11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시 교육청, 자치구 등은 올해 5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친환경 급식이 턱없이 부족해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광주 학생 1인당 평균 급식 단가는 2497원으로, 이중 친환경 식자재 구입비는 고작 200원에 불과하다. 이는 친환경 급식을 위해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남은 지난 3월부터 무상급식을 읍 단위 이하 유치원, 초·중학교 전체, 학생 100명 이하 고교 등 모두 1017곳으로 확대했다. 수혜 학생은 9만9500여 명이다. 총 소요 예산은 524억 원이었다. 특히 전남은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체 초·중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무상급식이 더욱 확대된다. 광주는 초등학교 대상으

246억2400만원을 편성했고, 여기에 도 교육청과 일선 시·군이 일정 비율로 부담하는 내년도 전체 무상급식 예산은 985억 원에 달한다.

양 시·도는 예초 내년 무상급식을 이보다 더 크게 확대하려 했지만, 재원을 공동 부담해야 할 자치단체의 재정 한계 때문에 소극에 그쳤다. 현재 진행중인 무상급식 예산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면 많은 액수인 만큼 각 자치단체들이 버거워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시의 경우 내년도 각 복지 예산 일부를 확보하지 못해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는 2013년부터 중학교 전체 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며, 전남도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자치구의 재정 한계에 달해 있는 만큼 정부의 복지예산 증액과 자치구의 예산 확보 노력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곧 죽어도 변명거리는 있다

“美 중심 탈피 중·러 등과 균형 외교 펼쳐야”

러 상트페테르부르크대 박종수 교수 인터뷰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대 박종수(54) 교수는 김정일 사망과 관련해 “대미 중심에서 탈피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균형적인 외교 발전을 이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20일 여수에서 기자와 만나 “김정일 사망은 우리에게 기회

이자 위기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이 미국과의 공조만 강화할 경우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결속할 수 있는 구실을 쥐 결국 대결구도를 형성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외교 안보라인의 친미와 기득권을 과감히 깨지 않으면 외교의 균형 발전은 도모하지 못할 것”이라며 “생전적 시각에서 탈피해 중·러와의 균형적인 관계 정립이 절실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그는 이같은 외교의 균형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외교안보라인의 ‘인적 쇄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김정일 사망 소식을 이틀 후나 알았다는 것은 사실상 외교안보라인의 기능이 마비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MB정권에 들어 외교안보라인이 전문성과 능력보다 정권의 코드인사로 채워져 그동안 여러 문제점을 노출시켜왔다”며 “무엇보다도 연속성이 중요한 대북문제를 담당할 인사는 안정성 보장과 더불어 반드시 전문성과 능력을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 ‘햇볕정책’과 노태우 정권

의 ‘북방외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김정일 사망은 2대(김일성-김정일)체 공고했던 1인 독재체제가 끝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정권의 결속도가 급격히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북간 내부 거래보다는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고 진단했다.

내년 5월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박 교수는 “김정일 사망은 엑스포 성공 개최에 악재가 될 수도 있지만 러시아를 잘 활용할 경우 북한 참여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며 “엑스포 폐막식에 푸틴을 초대해 내년 한국에서 치러지는 한·러대화포럼을 여수에 개최하겠다는 선언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크게 보자

스무살의 도약!
도전은 20년 동안 계속되었고
이제 더 큰 미래를 바라 볼 때입니다

2012 조선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 접수기간 : 2011. 12. 23(금) ~ 12. 28(수)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http://www.chosun.ac.kr)
- 전형유형 및 모집인원

전형유형	일반유형(가군)	일반유형(나군)	일반유형(다군)	계
모집인원	457명	971명	351명	1,779명

■ 문의처 : 조선대학교 입학처 062)230-6666

* 전형유형 및 접수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선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